민주 일당 독주는 일단 제동

■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제역할 할까

민노·무소속 등 非민주 2~4배 늘어

독점구도 약화…견제·균형 토대 마련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 진보성향의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들을 비롯해 비(非)민주(당)계 후보들이 상당수 의회에 진출하면서 기초·광역의회의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가 깨지는 듯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비 민주계 후보의 광역·기초의회 진출은 2~4배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 구성될 의회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역의회**=3일 선관위의 최종 집계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원 22명(비례 3명 포함)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2석(비례 1명 포함)을 확보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전체 55명(비례 4명 포함) 중 ▲민주노동당 3석 ▲무소속 4석 ▲한나라당 1석 등 모두 8석이 비민주계로 채워졌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광주에서 강은미(서구 4선거구) 당선자를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서 배출해내는 쾌거를 거뒀고, 전남에서도 정우태(장흥 2선거구)·이정민(보성 1선거구) 2명이 지역구에서 당선돼 전남도의회에 입성했다. 여기에 전주연 광주시의회 비례대표와 유현주 전남도의회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민노당은 이번 선거에서 5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1991년 개원이래 1대 의회에만 무소속 후보 4명이 진출했을 뿐 2대~4대 의회에서는 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민주노동당 의원 각 1명씩 뿐이었고, 모두 비례대표였다. 지난 5대 광주시의회는 의원 22명 중 모두가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당 소속인 광역단체장과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집행부 거수기' 역할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남도의회의 경우도 그동안 재보궐선거 등에서 민노당과 무소속 후보가 간헐적으로 당선됐으나 본 선거에서 무소속 4명을 포함한 '비민주' 후보가 다수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후보도 4년 만에 도의회 재진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당 독점을 누려왔던 광주·전남 광역의회에서 비 민주계 의원들이 집행부와 민주당에 대한 견제 세력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초의회**=비례대표를 포함한 광주지역 지역구 기초의원 당선자 68명 중 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72%인 49명이었다. 비 민주계 당선자는 ▲민주노동당 14명 ▲무소속 3명 ▲국민참여당 2명으로, 총 19명이 민주당 깃발 없이 당당히 기초의회에 입성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8명, 무소속 당선자는 1명 뿐으로 2배 가량이 늘었다.

전남지역 기초의원 243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서는 ▲무소속 49명 ▲민노당 19명 ▲국민참여당 2명 등 70명의 비 민주계가 기초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볼 때 무소속은 10명이 늘었고, 민노당은 16명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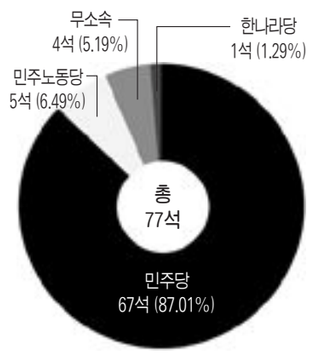
이로 인해 민주당 독식체제였던 기초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적은 곳도 나타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로 채워졌다. 실제로 목포시는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이전 의회에서는 단 1명만이 비 민주계 소속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민노당 소속 후보들이 무려 4명이나 들어왔고, 무소속 의원 1명도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비례대표를 제외할 경우 기초의원의 절반 정도가 비 민주계 의원들로 채워지는 곳도 5곳이나 되며, 민주당 당선자만으로 이뤄진 기초의회는 1곳도 없었다.

◇**집행부 견제 이뤄질까**=광역의회의 경우 비 민주계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가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의 경우 김선호·정희곤 등 진보성향의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 당선자 2명이 가세하게 됨으로써 충분히 의회 내 민주당 및 집행부 견제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도의회도 비 민주계가 8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세력화할 경우 집행부 견제는 물론 의회 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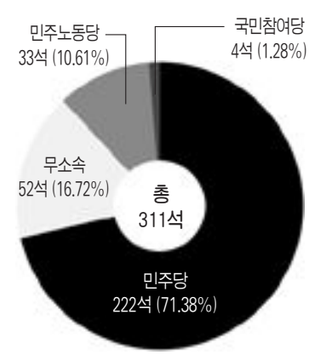
광주 희망과 대안 관계자는 "민주당 독점 체제 속에서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유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 일당 독주구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석 분포도



■광주·전남 시·군·구의회 의석 분포도



민주당 일색의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2월 광주시 기초의회 의원 정수 나눠먹기 파동때 시의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의회 청사 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 동부권 '무소속 블럭'

여수·순천·광양·곡성 민주당 후보 패배

'자기 사람 심기' 역풍…2년후 총선 변수

전남 동부권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강의 결집력을 보이며 무소속 돌풍의 주역이 됐다.

3일 개표 완료된 6·2지방선거에서 여수·순천·광양·곡성 유권자는 똘똘 뭉쳐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무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무원칙성을 가차없이 심판하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의 당선은 오만과 독선을 부려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정치적 타격을 입혀 2년 후 총선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동부권의 이 같은 반란은 선거 전부터 예고돼 왔다. 순천과 광양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현역 단체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 무원칙한 경선방법을 동원하자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순천의 경우 노관규 시장과 경선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공방을 벌여온 서갑원 의원은 다른 시·군에는 없는 체육관 경선까지 도입하며 공천한 민주당 조보훈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체면을 구겼다. 동부권 대패의 책임론까지 뒤집어쓸 처지에 몰렸다는 것이 당 안팎의 지적이다. 더욱이 서 의원은 오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어 마음 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시장은 정치적 라이벌인 서 의원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

광양시장 선거에서도 이성웅 시장은 지역구 의원인 우윤근 의원의 정치적 동반자인 민주당 서종식 후보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우 의원에 타격을 가했다. 이 시장 측은 "우 의원의 '무리한 자기 사람 심기'를 시민이 심판한 것"이라고 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노려온 우 의원의 당내 입지가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민주당 시장선거 경선 과정에 반발하면서 탈당한 예비후보들이 벌써 2012년 총선을 벼르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수의 오현섭 시장은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무소속 김충석 당선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다. 광양과 순천에서 불어온 무소속 돌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오 시장의 선거패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김성곤·주승용 의원에게 부담이다. 두 의원 모두 김 당선자와는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2년 후 총선이 벌써 걱정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 시작된 무소속 바람은 곡성으로까지 이어져 무소속 허남석 당선자가 현직 조형래 군수를 물리치는 대역전극을 펼치게 했다. 허 당선자는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뛰어 민주당의 아성을 넘어 지역구의 김효석 의원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김 의원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과는 DNA가 다르다"

참여당 유시민, 합당 부정적 반응

6.2 지방선거에서 친노(親盧)그룹이 약진한 가운데 '노무현의 가치'를 내세우며 올 초 창당한 국민참여당은 오히려 새 시험대에 서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리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 등 야권의 집중적인 지원에도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표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를 한 번도 꺾지 못하고 4.4% 포인트의 차로 패배한 것은 유 전 장관의 향후 행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 내에서 '확장성이 없는 후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입증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후보의 구조적 한계로 야권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당 간판급 인사인 유 전 장관의 한계가 노출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통합 논의가 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대표도 이날 인사차 영등포 당사를 찾은 유 전 장관에게 "앞으로 더 큰 연대를 하고 나아가 힘을 합치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밖의 논란에도 참여당 내부는 담담한 분위기다. 참여당은 일단 애초 20%까지 차이가 났던 지지율 격차가 5% 이내로 근접한 것은 오히려 유 전 장관의 표 확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첫 선거임에도 정당 지지율 4위(6.6%)를 기록하고 30명 안팎의 지방의원의 배출한 것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DNA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패배했지만 우리의 꿈은 살아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사에 당선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로 있는 한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함에도 불구, 참여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